

# 北대응, 머리 싸맨 당정...한미워킹그룹·판문점선언 논의

### 강경화 “한미워킹그룹, 우려 안다”...통일부 비준추진 의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후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최근 급격히 냉각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여권 일각에서 남북관계의 '결림 돌'로 거론된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추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호 통일부 차관의 각 부처별 상황 판단 및 대응 보고 직후 질의응답 형식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강경화 장관은 현재 상황 평가, 주요국 반응,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했다. 서호 차관은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남북관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라며 “정경두 장관은 주요 경과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대해 보고했다”고 전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우려가 전달됐으며, 강경화 장관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 간 협의체로,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남북관계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했으며 ‘중지론’까지 거론된 바 있다.

통일부는 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추진 검토 의사를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정해서 국회로 가져오면 국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참석자는 “(서호 차관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비준 내용 등을 얘기한 건 아니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대북전단 같이 쉽게 해결할 문제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애둘러 비판해 눈길을 끌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외교·안보라인 점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강 수석대변인도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이밖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입법 노력을 하되, 그 이전까지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현행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또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북한 관련 동향, 대북전단 대한 우리 대응, 남북관계 상호추진에 대한 우리 원칙 등 포괄적인 내용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호 통일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 김희재 의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역 현안·예산 꼼꼼히 챙길 것”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겸직



원회 위원으로 겸직됨에 따라, 청와대와 소통을 견고히 다져나갈 가교역할도 맡게 됐다.

김 의원은 “지역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신청했는데, 희망한 대로 상임위를 배정받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전남 지역의 유일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수시 해양관광 활성화 및 KTX 2시간 생활권 대 구축 등 여수와 전남 동부권 발전을 위한 SOC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산적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율러 “운영위에서도 문재인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남은 2년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여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이 이번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 개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건설산업 등 우리나라 실물 경제와 국민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상임위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등이 소관 기관이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배정받게 되면서 앞으로 지역구인 여수는 물론 전남 지역 SOC 등 각종 현안 사업들의 예산 확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 의원은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어 국회 운영 전반과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

## 여권서도 외교안보라인 책임론 분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인적쇄신론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직 김연철 장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되면 공식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도 이날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고 한다.

특히 김 장관이 전날 “남북관계 악화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김 장관 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분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온 만큼 김 장관보다 국가안보실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이다.

또 외교안보라인을 향해 대미(對美) 등 국제관계에 얽매어 남북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한 채 소극적 태도로

김연철 통일장관 사의 표명  
靑참모진에도 화살  
통일부 중심 NSC개편 의견도  
임종석·이인영 등 거론

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경계해야 할 건 안일함”이라며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모든 걸 잃게 할 수도 있다”고 외교안보라인에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외교안보라인 교체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는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기도 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남북문제 원로들의 오찬에 참석했던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참석한 한 분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일부 장관 중심으로 개편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두혈통’인 김 제1부부장이 대남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통일부 장관을 맡아 김 제1부부장의 ‘카운터파트’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 대권 주자이자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지낸 정동영 당시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고 NSC 상임위원장까지 맡겨 통일부에 힘을 실어줬다. 현재 김 장관의 후임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의 표명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최종 결정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